

긴급방역 - 피해업종 지원 등 당·정·청, 예비비 3.4조 투입

주 2회 관계장관 회의, 대책 마련 피해기업 국세납기 연장 등 주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과 관련해 기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가용한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긴급 방역·검역뿐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주 2회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업종·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수출부문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당·정·청 신종코로나 대응책

지역사회 전파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 격리 및 1:1 관리, 신속한 검사 추진 · 빠른 시일 내 표준적인 치료방법 정립 ·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관련 법안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 추진
경제 영향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용 예비비 3조 4천억원 신속히 활용 (목적예비비 2조, 일반예비비 1조 4천억) · 피해기업의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 최대 1년 유예를 정부에 요청 ·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요청
중국 내 자국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 유지 · 중국 내 우리 기업 지원 노력

자료/더불어민주당



마련하는 한편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피해

기업 대상 최대 1년간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피해기업·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절차 신속 처리 등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중국 후베이(湖北)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데다,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18명까지 늘면서 당정도 추가 입국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나 매장 폐쇄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 긴급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의료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연합뉴스



운전자 체온 재는 현대차 보안요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순차적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5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보안 요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납품 차량 운전자의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홍남기 부총리, 세정·통관 지원

의료·관광·여행 등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관세 분할 납부도 최대 1년까지 무담보로 해주기로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의료용품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고 관련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협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코로나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단 단란주점과 사행성 오락실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전국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설치된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징수 및 체납분 유예도 6개월 이내로 가능하다. 6개월 후에는 추가 6개월 재연장도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를 거쳐 지방세 감면도 시행한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금은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로 전환, 신청당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연합뉴스

17번 환자, 싱가포르 방문 후 확진 공항 입국장 혼돈... 방역확대 절실

18번 환자는 16번 환자 딸

일본과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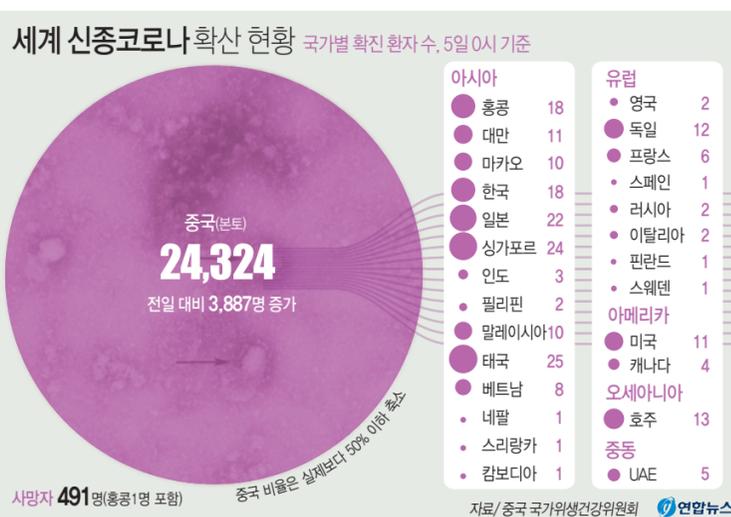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 외 국가의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중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싱가포르 까지...방역망 '구멍'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 확진된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 달 18~24일 콘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입국한 이후 행사 참석자 중 말레이시아인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만 특별검역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일본과 태국에서 입국한 환자들은 신종 코로나 증세가 발현을 했음에도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격리조치되지 않은채 진료를 받았고, 지역사회에 노출된 셈이다.

일본에서 입국한 12번 환자는 48세 남성이다.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했지만 국적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자료/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러한 정보가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전달돼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태국을 여행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국내 16번째 환자는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광주광역시 21세기병원 3층에서 인대수술을 한 딸을 간병하는 등 일주일 넘게 여러 병원을 거치며 지역사회에 노출됐다. 간병을 받은 16번 환자의 딸(21세) 역시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에 있던 환자를 모두 격리한 상태.

◆위험 국가 확대는 '아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오전 중수본 회의에서도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부분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외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등 검역 강화 조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어떤 조치가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확산을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라며 “그 이외에도 비용 효과성을 검토해야 하고, 실행 가능성과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사회적, 외교적 문제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기업 2곳 중 1곳 “신종 코로나에 영향”

매출감소 30%, 자재수급 차질 28% 등

신종코로나, 기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기업 202개사 설문조사	영향 미친다	49.5%	영향 없다	50.5%
외부활동 자제에 매출 감소				30%
중국산 자재 수급 차질				28%
해외출장 자제				26%
투자 위축				23%
해외수출 감소				21%

자료/사람인

기업 2곳 중 1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사람이인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가량(49.5%)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받는 영향으로는 관광객 감소와 외부활동 자제 등에 따른 ‘매출 감소’(30%,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중국산 자재 수급 차질’(28%), ‘해외출장 자제’(26%),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23%), ‘해외 수출 감소’(21%), ‘경영성과목표 조정’(18%), ‘인력 부족’(13%), ‘신규 채용 축소 및 채용 취소’(12%), ‘공장 중단’(7%) 등이 이어졌다.

이들 기업 중 63%는 악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대응책으로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안 마련’(30.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량 축소나 생산 중단’(27%), ‘부품 등 자재 수급할 대체 국가 탐색’(23.8%), ‘신규 투자 자제’(20.6%), ‘부품 등 자재 국산화’(15.9%), ‘재택근무 확대’(12.7%) 등을 꼽았다. /한용수 기자